

제26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강사: 진창수

소속: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주제: 한일협정 문서 공개와 한일관계 전망

일시: 2005년 10월 11일 (12 : 00 - 14 : 00)

*강연 내용

한일협정 문서의 공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가운데, 정보공개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 3명이 문서공개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문서공개 작업은 올 2월부터 약 4개월간 문서를 읽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던 부분은 크게 나누어 독도 관련 문서와 어업협정 관련 문서 등으로, 공개와 비공개 문서를 판별하는 것이 민간심사위원들의 역할이었다. 민간위원들은 대체로 전부 공개하자는 의견이었지만, 국제관례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공개와 비공개의 세가지 카테고리

1. 외국에서 생성된 문서(주로 일본에서 생성된 것) - 관례에 따라 일본에 공개여부에 관한 의향을 묻기로 함.
2. 외교문서지만 외교안보, 국방에 관련된 중요한 기밀문서(군선의 항로, 무기의 배치, 치명적인 개인정보, 다른 부서의 기밀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것)
3. 외교적 쟁점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

1과 2의 경우는 일본 측에서 공개를 허락하였는데, 모든 문서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 측의 판단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국방과 개인정보는 시간이 많이 흘러 그 효력을 상실한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3번 문서의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전면적인 비공개를 희망하였다. 독도 문제 등 쟁점화되어 있는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자칫 외교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비공개의 방법에는 서류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 단락만 공개하지 않는 것, 키워드만 공개하지 않는 것의 3가지 방법이 있는데, 3번과 관련된 문제에서 일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가 정부 각처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전부 공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 또한 보상문제, 협약무효화론 등이 나타날 수 있어 문제였다.

65년 한일협정을 졸속외교, 굴욕외교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에 반해, 공개 후에는 졸속, 굴욕 협상보다는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다. 이것은 민간위원들의 한일 협정의 평가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왜 한국이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얻어내지 못한 한일협정을 맺을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1.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한일협정에서 한국은 전승국의 입장에서 회담을 진행할 수 없었다. 한국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아니라, 그 당시 남아있던 재산권과 청구권 등의 민사상의 권리 뿐이었다.

2. 당시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이는 매우 커서, 한국이 일본의 1/10에 불과한 정도였다.

3. 한일협정은 미국의 개입과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이런 세가지 이유로 한국은 한일협정을 맺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한일회담의 객관적 평가는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일본의 전략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터리 협약, 회담이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일본 측의 문서가 공개되면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번 문서공개 만으로도 정부의 노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일협정에 관해서는 한국의 발전, 특

히 경제성장에 있어 일본의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과 당시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일본의 망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면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기존의 관념과는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Q&A

일반적으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한일협정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습니다. 독도 문제, 어업협정, 미국과의 관계 등이 새로운 사실의 영역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이번 문서공개가 큰 의의를 가질 수도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살펴보면 전문가 영역에서 새로운 사실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또한, 공식문서 외에 비공식 외교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진정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게 아닐까요? 기존의 연구에서 전문연구자 사이에서는 학문적인 담론이 이미 형성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들과 사회적 담론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문서공개의 가장 큰 의의는 많은 내용들을 외교문서로 확인시켜주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학계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내용만 연구할 뿐, 나머지 부분은 연구가 되지 않은 것이 많은데, 공백이었던 부분들(어업협정, 재일한국인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교사료는 그 자료의 분량이 많지 않아,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밀실회담과 같은 비공식 외교에 대한 자료는 없기 때문에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연구결과와 사회적 담론이 유리되는 것은 정책서클과 같은 중간 서클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중간 서클이 활발히 활동하여 연구자와 사회적 담론 사이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